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 일 환



사례1) 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인 장모씨 부부는 올해 초 생계비 지원이 월 36만원에서 22만원으로 줄었다. 70대 노령인 장씨 부부에게 지원금이 생활비의 전부인데 지원이 줄어 하루하루가 버겁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 의절하고 사는 아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어 그가 번 돈이 국세청 전산망에 고스란히 뜨기 때문이다.

그나마 올해는 줄어든 지원금으로 균형이 베린다지만 내년은 그마저 끊길 판이다. 들리는 소식에 머느라니가 돈벌이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동사무소에 물어보니 부양 의무자가 소득 기준을 넘어서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사례2) 군을 전역한 이모씨는 2학기 복학을 위해 기초수급자에 주는 장학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했다. 제대 후 호프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가출로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이씨는 복학 전 생활비를 보태려한 아르바이트가 복학을 가로막는 일이 될지 몰랐던 것이다.

지난해 1월 재산과 소득을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행복e음)이 개통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행복e음은 국세청·국토 해양부·건강보험공단 등 20여 개 기관의 소득·재산 자료 등 213종을 개인·가구별로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수급 대상

자의 소득·재산 정보가 완전히 밭가벗겨지고 있다. 특히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자료는 그동안 파악되지 않았던 아르바이트로 번 돈까지 드러난다. 그러나 보니 행복e음을 도입한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수급자 45만여 명이 수급자격을 상실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가 11만 6000명에 이른다.

수급자에게 있어서 지원금은 흐의호식

기초수급자를 울게 하지 말라

구청·동사무소의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수급자들의 목을 쥔다. 이명박 정부 들어 수급자들에게 돌아갈 복지예산은 크게 위축됐다. 세세한 부분까지 메스가 가해졌다. 이 때문에 자자체는 예전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수급자를 선별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부려와 보살핌 우선돼야

행복e음이 구현하는 투명한 복지 그럴싸하다. 하지만 투명한 복지가 수급자들의 속사정을 잣대로 짚을 수 있는 의문이다. 그들의 속사정을 귀기울여 들어주는 공무원들은 또 몇이나 될까?

사실 수급자는 슬프고 미안하다. 하루 하루 맞닥트리는 삶이 고단해도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 다달이 통장에 찍히는 정부 지원금이다. 팬스레 무위도식하는 것 같아 미안하고 몸이 아파,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돈을 못 버는 신세가 슬프다.

또 간간이 들려야하는 동사무소와 구청은 은탕·냉탕이라 발걸음을 할 때마다 무겁다. 이번 복지 담당은 좀 친절한 사람인가하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어떤 이는 수급자를 정부 예산이나 축내는 그런 부류로 보는 것 같아 눈도 마주치기 겁난다. 또 어떤 이는 고압적이다. 해오라는 서류는 어찌나 많은지..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그들에게 교통비도 버거운데 이리저리 혼매기 일쑤다.

수급자에게 있어서 지원금은 흐의호식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생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다. 당장 그들에게서 그 것마저 빼앗아 버리다면 그들은 생존의 동력을 바로 잃어버린다. 물론 게 중에는 부도덕한 방법으로 수급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일부의 부도덕한 수급자를 털어내기 위해 수많은 수급자를 색안경으로 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우리 사회에, 아니 당장 지척에서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고 돈 때문에 천륜을 끊은 사연은 부지기수다. 사업 실패 때문에, 병 때문에, 사회의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살 수 없이 많다. 그들에게 정부와 자자체가 들어대는 기계적 잣대는 가혹하다.

혹자는 부정수급이 공평한 복지를 막고 있다고 질타한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공

평한 복지란 공급자 중심일 때 실패한다. 고른 혜택만이 성공의 키워드가 아니다. 공평한 복지의 성공 키워드는 배려와 보살핌이다. 공평한 잣대만 들이댈 게 아니라 억울한 사정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는지 살피고,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급자와 스킨십을

물론 수급자 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파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방법은 분명히 있다.

당장 일선 복지담당들이 스킨십만 강화해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들과 얼굴을 맞대고 속사정을 들어주는 것이 시작이다. 들어주고 또 들어주다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꼭 나온다.

정부는 내년 기초수급자를 올해보다 8만명을 더 줄이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다. 무더기 수급 탈락이 불을 보듯 뻔하다. 12월 대선 결과에 따라 복지예산 편성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의 통큰 결정이 없는 한 복지예산의 대폭 증액은 기대난망이다.

혹자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수급자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을 좌절하게 놔둘 수 없는 일 아닌가.

최소한 일선 복지창구에서도 희망을 엿보게 해달라. 그들이 삶에 치이고 훌대에 치어 물지 않게 해달라. 단 5분만 이라도 그들의 가슴 아픈 사연에 귀기울여달라. 작은 배려와 귀기울임이 그들이 다시 자활의 동력을 얻는 시작임을 믿는다.

〈방송보도부장 겸 어른매체부장〉

진료 거부

에는 등법 제89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은 물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하여 자격정지 1월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그렇다면 법률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하나 이에 대한 관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시설 및 인력이 없거나, 진료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거나, 의사가 이론 경우 등과 같은 8개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진료를 할 수 없어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하지 않는 진료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볼 수는 없다.

최근 들어 의료법에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하위법에 담아야 한다는 것에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정당한 이유라고만 명시하다 보니 현실에서의 적용이 사실상 어려워지

는 것이 사실이며 시대가 변한만큼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정당한 진료거부로 인정받기 위

해서는 매번 재판부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며, 의료현장에서 진료거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법적인 해석 등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법원 판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의협의 연구 정도를 살펴볼 때 정당한 진료거부 사례에 대한 논의는 3가지 범주에서 얘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물리적으로 진료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범주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해 진료를 행할 수 없을 때, 병상·의료인력·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외래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범주로는 의학적인 판단에 근거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한 범주로 의사가 다른 전문 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을 부족한 경우,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요구하는 경우,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상급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학적인 판단 아래 충분한 설명 후 요양병원 등으로 퇴원을 시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 범주로는 가장 뜨거운 논쟁은 절쳐야 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진료거부다.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의료인에 대해 모욕·명예훼손·폭행·업무방해 등을 할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법에 따를 수 없다고 선언한 경우 등이 능동적인 진료거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환자의 생존에 관한 문제를 의사의 인격에 관한 문제와 맞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의 인격권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휘두르는 환자 앞에서도 하포크라테스 선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에 의문이 든다.

〈동아병원장〉

로서 교육적인 측면이 강조된다면 수영선수권대회는 각종 스포츠선수, 마케팅, 첨단 기술이 접목된 대회이며, 전 세계 10억 명이 TV를 시청하게 되고, 40억명에게 언론 노출이 되는 최고의 인기 스포츠 이벤트이다. 한마디로 세계의 눈과 귀가 광주로 집중되면서 국제도시로서 도시브랜드 제고 효과는 상상을 뛰어 넘을 것이다.

유니버시아드 개최로 인하여 광주는 선수촌 아파트 재건축, 각종 경기시설 신축,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유니버시아드가 광주에 남겨줄 유산을 더욱 발전시키기 고 이어가기 위해 내년 7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다시 한 번 '광주, 코리아'의 이름이 물려 펴질 수 있도록 광주 시민의 힘과 자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광주시 체육대회지원국장〉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안기석

서 우리 광주에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먼저 광주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유니버시아드의 유산을 활용하는 경제 대회이다. 유니버시아드 개최를 계기로 우리 광주는 남부대 수영장,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 등 국제 대회 규격에 맞는 최첨단 수영장을 갖추게 되며 2019수영대회는 경기장 신축 없이 최소비용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해 국제 스포츠 이벤트 개최 시 경기장을 신축하는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면 개최지 결정에 있어서 국제수영연맹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꺼려하는 주제이다.

따라서 기존 대회의 시설을 활용한다는 부분은 광주의 유치 전략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주제를 반영하여 대구는 유니버시아드에 이어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치렀고, 2013년도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할 예정인 러시아 카잔은 이미 2015년도 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해놓은 상태이다. 이렇듯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일회성이 아닌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광주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여러 가지 면에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초토화된 광주·전남·복구·지원 시급하다

초강력 태풍 '불라벤'이 할퀴고 간 광주·전남지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역대 최악의 태풍인 '매미'나 '루사'와 맞먹는 위력을 가진 불라벤이 28일 오전 초속 50m로 서해상에 북상하면서 곳곳이 운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다. 상황은 진도, 고흥 등 남해안 일대 양식장 등 대혼란을 겪었다.

특히 태풍을 가장 먼저 접한 광주·전남지역은 위력이 그대로 가져지면서 인명을 비롯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28일 낮 12시 13분에 광주 서구 유덕동의 한 주택 방 안에서 임모(89·여)씨가 벽돌 더미와 무너진 지붕에 갈려 숨졌다.

최악의 정전사태도 발생했다. 전봇대가 쓰러지거나 전선이 끊겨 진도에서 3시간 동안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나는 등 광주·전남 전역에서 이날 오후 6시 현재 85만1573호가 정전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광범위한 지역이 정전되면서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광주시 등 도심도 가로수가 뽑히고 간판이 떨어져 도로가 통제되는

교과부·시교육청 갈등 언제까지 갈 건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 일선 학교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다. 가해사실을 전제 학년에 대해 기재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고교 3학년 이외에 기재를 거부한 광주시교육청이 충돌하면서 대부분의 학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려 고3을 제외한 학생들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록을 무기한 보유했다. 교과부가 초·중·고 전 학년에 대해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도록 한 교육부 지침을 일부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 대해 감사 검토 등의 방침을 구두로 전달했다고 한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은 학생부에 기록하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직접 내려보내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최근 교과부 지침

無等鼓

은 불가피하고 또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또, 그들 곁에 둘러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강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것 역시 인간사회의 어쩔 수 없는 단면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세상살이가 한 깨풀 벗겨지고 나면 드러나는 것은, 물론 모두는 아니겠지만,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부자와 권력자의 대부분은 돈과 권력이라는 호랑이를 뒷세우고 있다

다는 사실이다.

법원이 대기업 총수와 저축은행 최대주주 등 이른바 재벌들에게 있따 실형을 선고하고 나섰다. '사회적 기여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거론하며 기업 총수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온 법원의 옛 모습을 생각하면 그

야말로 상전벽해다. 비리를 저지른 재벌과 권력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어색한 표정으로 도망치듯 법정을 빠져나오는 것을 지켜보며 씁쓸해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런데 법 앞에서는 돈도 권력도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 그야말로 상식이 아니던가?

인간 사회에서 부자와 권력가의 출현

/honggi.jung@kwangju.co.kr

光州日報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論述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자자·자국·구도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면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7-9600》 《F A X 2200-6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 A X 227-9500